

[주간동향] 2006. 6. 29~7. 5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 법무부, 민법 개정안으로 배우자 상속 변화
-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발표
- ❖ 통계청, 2006년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발표
- ❖ 여성가족부, 이혼 여성 양육 소송비 지원

## ❖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는 높아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는 미비해 출산을 저하 등 사회적인 부작용도 낳고 있다. 통계청이 2일 여성 관련 각종 통계를 모아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 49.8%에서 지난해 50.1%로 상승,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52.6%로 남성을 따돌렸고 행정고시에서는 44.0%, 사법시험에서는 32.3%를 각각 차지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은 525명으로 전체 지방의회 의원 중 14.5%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2년 3.4%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주요 전문직 중 여성의 비율은 지난해 의사 19.2%, 치과의사 22.2%, 한의사 12.4%, 약사 63.8% 등을 기록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교수 등 대학 교원 중 여성의 비율도 2004년 17.2%에서 지난해 18.1%로 높아졌다. 과거부터 여성 진출이 활발했던 초등학교 교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1.0%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 여성 교장의 비율도 8.7%를 기록했다. 여성 취업자중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004년 16.9%에서 17.5%로 상승했다. 가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구주도 계속 늘어 올해는 314만5천명으로 19.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 부분을 보면 여성의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2004년 79.7%에서 지난해 80.8%로 상승했다. 남성의 경우 2003년부터 80%대를 넘었지만 여성의 대학 진학

률이 80%대를 기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남성(83.3%)과의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석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은 43.0%,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서는 26.0%를 각각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여성의 지위가 눈부시게 신장되고 있지만 아직 줄여야 할 격차는 크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 근로자는 25.6%에 그쳤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41.5%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 상용직이 41.1%, 임시직과 일용직은 24.9%였다.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2.6%에 그쳤다.

결혼·출산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초혼연령이 지난해 27.7세로 나타나 1990년보다 2.9세가 늦어졌으며, 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8명으로 2004년의 1.16명에 비해 0.08명이 줄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95명)을 육박하는 수준이다.

#### ❖ 법무부, 민법 개정안으로 배우자 상속 변화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50%는 아내에게 상속된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들과 배우자 간 상속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졌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가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42.9%, 3인인 경우에는 33.3%, 4인인 경우에는 27.2%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내용에 따르면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의 절반을 아내가 상속받은 뒤 나머지 절반을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는 항상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관련된 여성 배우자의 지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인 남편이 갖는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1:1:1.5로 나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우선 50%를 상속받는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시안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동시에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반영한 것이나, 1자녀 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몫이 60%까지 가능한 것을 50%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과 부부의 재산은 상속이 아니라 원래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발표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4일 오는 2010년까지 여성일자리 60만 개를 만들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2005년 현재 50.1%에서 55%까지 증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1년간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이날 오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여성인력개발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계획은 먼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 일자리 약 60만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총 140개 사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대 부문은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여성 능력개발·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정책추진 체계 정비 등이다. 140개의 사업과제는 13개 부처 및 지자체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62개 사업과 기존사업을 확대·강화한 7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정부가 역점을 둘 부분을 살펴보면, 육아가사·노인부양간병 등 가정 내 돌봄노동을 사회제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데 비중을 두어 전업주부 직장복귀프로그램(Home to Work)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취업을 기피했던 중소기업으로 여성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역 내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취업의 구심점으로 육성하여 여성희망일터 프로젝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은 바로 '여성'이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가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실제로 주요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시기에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약 9% 이상씩 급속하게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될 때 향후 가능한 노동인구는 여성잠재인력이며,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종사상 지위도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으로, 여성인력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이번 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 통계청, 2006년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발표

7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는 983만 5000명에 달했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종퇴한 후 첫 취업까지는 평균 1년이 걸렸다. 이는 2004년의 11개월과 지난해 10개월보다 길

어진 것으로, 이 가운데 10%는 3년 이상이 걸렸다고 답했다. 청년 취업자 중 70%는 2년 안에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취업 준비생 125만 4000명의 40% 이상은 7급이나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 이유는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1.4%,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사정이 21.3%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들의 선호 직업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이 40.1%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체 16.2%, 고시 등 전문직 11.5%, 언론사와 공기업 9.1%, 교사 7.9% 순이었다.

한편 55~79세 고령층 인구는 모두 833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천명(2.9%)이 증가했고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3%로, 평균 퇴직 연령은 54세였으며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평균 20년 9개월로 지난해보다 1개월이 줄었다. 남성이 23년 5개월로 여성의 18년 3개월보다 5년 2개월 길었다. 또 이들의 60%는 일하는 즐거움이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 일자리를 다시 갖기를 원했으며 평균 이직 연령은 남성이 만 55세, 여성이 만 52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년가량 늘어난 것이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정년퇴직이 12%에 불과했으며 건강상 이유가 27.5%로 가장 많았다. 취업을 원하는 고령층들의 임금은 월 평균 50만~100만원 미만 38.1%로 가장 많았고 100만~150만원 미만 28.2%, 150만~300만원 미만 15.6%, 50만원 미만 13.9% 등이었다.

#### ❖ 여성가족부, 이혼 여성 양육 소송비 지원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3일, 이혼이 진행 중이거나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 여성에게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1인당 40만원씩의 양육비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송비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미정이나, 일단 소송비용이 없는 모든 이혼 여성을 지원하되, 양육비 승소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소송비용을 반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간 11만3000건에 달하는 이혼 소송 중 3%가 양육비 관련 소송으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매년 3400여명의 이혼 여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성이 가장인 가족이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78%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이혼 가정의 아동 빈곤율이 일반 가정의 3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혼 소송이 급격히 늘어나 정부가 이혼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